

문화와 산업융합

1. 지역간 연계협력사업의 추진현황

I. 지역간 연계·협력의 확대

현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“지역균형발전”이며 광역화전략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광역경제권, 기초생활권 등 3차원적 계층별 협력체로 운영 매카니즘으로 전제하고 있는 점은 지역협력이란 그동안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이미 정립된 개념으로 폭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. 특히 우리에게 다가온 고령화, 저출산 등 독자적으로 지역발전사업을 추진하는데 동원할 수 있는 인력과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중앙-지방간 협력사업, 자치단체간 협력사업, 사업(정책)간 협력사업 등 다양한 협력방식을 추진함으로써 부족한 인적, 물적 사업역량을 상호보완적으로 배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 구체적으로 지역간 연계·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분산투자로 인한 거래비용 절감을 위하여 투입 대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공동 생산

시행, 집중지역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내용을 반영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.

〈표 1〉 연계협력사업의 지원현황

구 분	2010년	2011년	2012년	광특계정
기초생활권 (시·군)	-	83억원 (10개)	123억원 (12개, 신규 2개)	지역계정
광역경제권 (시·도)	540억원 (30개)	1,000억원 (46개, 신규 16개)	1,150억원 (46개, 신규 150억)	광역계정
초광역개발권 (광역권간)	67억원 (1개)	148억원 (1개)	215억원 (1개)	
계	607억원 (35개)	1,231억원 (62개)	1,488억원 (67+α)	

주민들의 생활패턴은 광역화된 지가 오래이며, 지역 그리고 교류활동의 범위도 행정구역을 벗어난지 오래입니다. 5+2 광역경제권은 현 광역경제권 확대라는 정책기조의 가장 핵심적인 지역발전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정부는 2